

“노동이 배제된 산업 중심” 금속노조, 사측 4차 제시안 규탄

16일 8차 중앙교섭 ... 최저임금·정년연장은 여전히 미제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6일 오후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8차 중앙교섭을 가졌으나, 노동이 배제된 채 사측의 이해관계만 담긴 4차 제시안으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인공지능(AI) 도입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요구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정년연장에 관한 안은 이번에도 내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3항에서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표현을 '협의체계 조속히 마련'으로 수정했으나,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 규모별 지급능력, 업종별 경영여건 고려' 조건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1항에 명시된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은 단협 효력 확장 제도 취

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현"이라며 "효력확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아둔 조건들은 삭제하고 원안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용자 측은 <인공지능(AI) 도입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요구안 2항인공지능 (AI) 도입시 '노사 사전 합의 전제 도입'이 아닌 '실무적 사항 협의 후 진행'이라는 문구를 고집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이미 신기계·신기술 도입 시 고용안정 변화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게 돼 있다"라고 꼬집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안정뿐 아니라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노조의 정보 요구 및 사전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요구안 3항에 대해 "조합원의 인사정보와 노동과정에 대한 정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수집·처리·활용되는데 노조가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라며 사측의 전향적인 원안 수용을 요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태도를 향해 "사용자측 제시안은 노동은 철저히 배제한 산업 중심 안이 아닌가"라며 "8차 교섭인데 대정부 요구안도 정년연장관련 요구안도 차기 교섭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이 말하는 인공지능(AI)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다"며 "인공지능(AI) 도입시 회사가 모든 것을 노조에 제공해야하는 문제 생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돼야 한다"며 우려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차 중앙교섭을 23일 충남 케이엠펜지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